

##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북중관계 변화 전망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 북미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중국의 시각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과 대결의 산물인 판문점에서, 적대적 관계를 종결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포함한 다방면에서의 남북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은 70년간 상호 적대관계를 지속해온 북미 간 신뢰형성과 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성과를 남겼다.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체제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였고, 상당한 포괄적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특히, “새로운 북미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상호 간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도 중요하나 북미 간 신뢰형성과 관계개선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복잡하고 어려운 비핵화 문제 해결에 공동의 인식적 신뢰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이다.

이번 북미 간 포괄적 합의는 과거와는 다른 분명히 차별화된 성과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개인적 신뢰 토대를 구축하였고 북

한체제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관계 정상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탄도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한미연합 훈련 중지 등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향후 북미 협상 동안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상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부에서 제기하는 CVID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일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과거와 달리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상호 간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급속한 관계개선과 발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향후 중국은 남북-북미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국이자 동북아 역내 안정자로서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책임 대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6월 12일 북미 정상 합의문에 대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지난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북미 간 상호대립과 적대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남긴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돌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화로 설명하였다. 향후 중국은 남북-북미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국이자 동북아 역내 안정자로서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책임 대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북미 양국 정상이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솔직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줄곧 제기하였다. 특히 현재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은 어느 일방의 양보 혹은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대북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이 확실히 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미 간 조속한 대화와 협상 정례화, 그리고 우호적인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북한이 직면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로섬(零和博奕) 방식이 아닌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중국식 공동안보(共同安全)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 관영매체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획기적인 관계개선 및 진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보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북미-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요 관영매체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상호 간 신뢰구축이 진전되며, 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현재 북한이 직면한 군사-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의 목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의 필요성 등을 크게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 경쌍(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에 따른 적대적 대결 구도 해소, 신뢰 회복과 구축을 적극 지지하며 북미 양국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경쌍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 발언에 대해 중국식 쌍중단(雙暫停: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 해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평가하면서 단계적 접근(progressive)-동시적 조치(synchronous measures) 이행을 더욱 강조하였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발표 직후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 합의문이 중국에서 줄곧 주장해온 쌍중단 제의에 완전히 부합되고 남북, 북미 관계개선의 기본적 여건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인 쌍궤병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노력에 높은 찬사를 보내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토대로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합의문 이행과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바탕으로 신안보관, 공동안보, 인류문명공동체 등과 같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제로섬(zero-sum)해결방식을 촉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바탕으로 신안보관, 공동안보, 인류문명공동체 등과 같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제로섬(zero-sum)해결방식을 촉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북중관계 전망 고찰

향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으로 역

내 강대국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 한체제 안전보장에 있어 북미 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전보장 방식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식 해결방안(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의 북중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양국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다가 북미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북중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대북 경제지원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중국을 방문해 개혁개방의 경험과 각종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차례의 북중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양국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다가 북미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북중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예상된다.

지난 두 차례 북중정상회담에서 대규모 인적 교류, 경제투자, 북중 경험 등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끝난 상황에서 북핵문제 역시 일정부분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 북중 간 인적·물적 교류는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다. 특히 6월 12일 경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차후 대북 경제 제재 완화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를 보면 북중 경제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북중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건설 중심 노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북중 간 경험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11일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시 중국 정부는 "지금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긴장감을 만들어 내는 행동을 피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협정,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북한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은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중국이 줄곧 주창한 쌍중단 제안이 실현되는 것이며 결국 쌍궤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결국, 향후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북중 양국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군비통제, 주한미군, 전략자산, 한미동맹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준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친미국가 가능성,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의제선정, 북한의 주한미군 주둔 허용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중 포위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신설,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고조,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이 전통적 북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은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협정,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북한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드리워진 평화적 분위기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

정 체결에 참여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서명국이자 바로 그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희생된 아픈 역사적 기억이 있어, 남북미중 4자가 다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해소라는 차원에서 중국이 용인할 가능성도 일부 있으나 평화협정 체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두 차례에 걸친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북중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에서 자국이 절대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외연 확장과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6자 회담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도 점차 추진한다는 태도다.

일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친미국가 가능성,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의제선정, 북한의 주한 미군 주둔 허용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 우리의 대응전략 모색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자국식 북핵 문제 해결법인 쌍중단(雙暫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 동시병행)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태도다. 특히 중국은 조속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을 더욱

촉진해 나가면서 주변국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협력을 하기 위해 공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으로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9.19 공동 성명 원칙에 따른 6자 회담 재개를 점차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결, 대북 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6자 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중국은 북중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에서 자국이 절대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외연 확장과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6자 회담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도 점차 추진한다는 태도다.

한편 현재 중국은 대북제재 지속 여부 등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거론하며 제재는 수단과 목적이 아니며 제재만으로 북한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어 조속한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촉구하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동북 3성까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보고 있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 간 신뢰구축을 하며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향후 중국은 공동안보 관점에서 지속적인 남북-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이며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시각을 강조하여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지난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 주도의 인



류문명공동체와 공동안보를 강조하며 "나의 안보를 위해 상대방의 안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자국의 이기적 안보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소, 조속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점차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및 실질적 대북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중 3자 대화, 남북미중 4자 대화, 남북미중일러 6자 대화 등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 및 쌍궤병행 방안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남북, 북미, 북중 관계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 시도와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남방 정책 간의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남북중 3국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여 다시금 남북교역이 활성화된다면 남북중 3국 간 고속철도와 도로 등 기초 인프라 시설 연계가 가능하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2기를 맞는 중국은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대중 포위전략 차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동맹으로 성격이 변화된다면 한중 관

계에도 상당한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늦어도 2050년까지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구상이 있으므로 주한미군 문제나 한미동맹의 특수성 문제는 결국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문제도 중장기적 대외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미중관계 역학 구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상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강조하며 중국 중심의 신형 국제관계 질서 구축을 제시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보는 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점차 축소되는데 반해 안보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남방 정책 간의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남북중 3국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여 다시금 남북교역이 활성화된다면 남북중 3국 간 고속철도와 도로 등 기초 인프라 시설 연계가 가능하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중간 협력 초점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더욱 집중하며 한중 관계가 남북, 북미, 한미,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 주도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이제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 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번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 세종연구소 학술지 안내

『국가전략』 제24권 2호 2018년 여름

### - 목 차 -

#### [논문]

- |  |             |
|--|-------------|
| 21세기 미중 핵 안보 딜레마의 심화: 저비스의 핵억제와 안보 딜레마이론을 중심으로         | 신성호         |
|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 이상현         |
| 힘의 경쟁시대 동아시아 역학구조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br>힘의 경쟁시대 힘의 요건을 중심으로 | 백병선         |
| 대북 군사전략 개념의 확장: 소진전략을 중심으로                             | 박민형·김강윤     |
| 한국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배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유재욱·박건우·정현주 |
|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 이왕휘         |

### 『국가전략』 공모 안내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국제정세의 분석, 주요 국가 연구 및 민주주의 관련연구, 국가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학술 연구 등의 주제를 환영합니다.

- ☞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국가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국제정세의 분석, 국가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학술연구 등의 주제를 환영합니다.
- ☞ 보내실 글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재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세종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의 길이로 제출 하되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국가전략』 '원고집필요령'에 따라 '아래아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응모시에는 원고와 200자 내외의 '논문요약문'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휴대폰,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1-750-7616(Tel),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국가전략』 편집위원회 간사)

### 정세와정책 | 2018년 6월 19일

발행인 | 백학순 편집인 | 정성장 편집기획위원 | 홍현익, 우정엽, 이성현, 정재홍,  
편집간사 | 안아람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13449)  
전화 | (031)750-7616 팩스 | (031)754-0100  
홈페이지주소 | www.sejong.org

- \* 『정세와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수시 발간하는 E-출판물로 주요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외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정세와정책』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정세와정책』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